

“중대재해법 1호 안돼” 대거 휴업에도... 끊이지않는 재해

담양서 암롤트럭 기울며 작업자 사망... 안전벨트 미착용 등 조사 노동계 “여천NCC 튜브 교체작업, 인허가 절차 무시했다” 의혹도 광주·전남 산업현장 올 13명 사망... 잇단 참사에도 안전의식 실종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서 기업들 간 '1호가 되지 말자'는 분위기가 확산, 대거 휴업에 들어가는 등 긴장 상태에서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법 시행을 앞두고 중대재해처벌법을 안내하는 해설서를 만들어 배포하는가 하면, 주요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에 나섰음에도, 비용 절감·관행 등을 이유로 안전관리가 뒷전으로 밀리는 행태는 여전한데다, 현장에서 안전의식과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담양경찰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전 9시50분께 담양 대전면 제지업체 조각장에서 21t 트럭에 실린 고휘연료를 내리다 차량이 한쪽으로 쏠리면서 작업중이던 A(66)씨가 숨졌다.

A씨는 원료를 납품하기 위해 당시 암롤트럭(arm roll truck) 운전석에 앉아 장비를 조작하던 중 차량이 한쪽으로 기울면서 조수석으로 떨어졌고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암롤트럭은 적재함의 장착·탈거가 가능한 트럭으로, 쓰레기나 폐기물 운송에 쓰인다.

경찰은 A씨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고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한 점에다, 트럭과 적재함을 연결하는 고리가 풀려있었던 상태 등을 확인하고 안전 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조사중이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해당 원료를 납품받는 업체의 안전관리 의무 위반 혐의를 들어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하기 위한 조사를 진행중이다. 해당 회사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안전장비 등을 제대로 갖추지 않은 상태

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다 숨지는 결과가 발생한 만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가능하다는 게 노동계 시각이다.

같은 날 여수 석유화학 제조업체인 여천NCC 3공장에서는 열교환기 폭발 사고로 4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여천NCC측은 열교환기 청소를 마치고 교환기 내 가스 누출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등이 제시하는 안전 조치를 따르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교환기에 물을 넣고 압력을 높이며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는 수압테스트를 원칙적으로 진행해야 하지만, 돈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잠정 때문에 위험성이 더 높은 공기압 테스트를 진행했다는 게 노동계 지적이다.

폭발 사고로 인한 위험성을 우려, 방호벽 등 적절한 장해물을 설치하도록 한 규정도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노동계 주장이다. 또 교환기 청소 작업 외에 관련 기관 인·허가 사항인 일부 튜브(Tube) 교체 작업을 진행하면서 행정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의혹도 노동계에서 제기되는 상황이다.

앞서,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로 인한 업계의 단일한 안전의식에 따른 비판적 여론과 중대재해법 적용으로 인한 엄벌을 우려한 긴장에도 중대재해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올들어 2월 중순까지 광주·전남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로 목숨을 잃은 노동자가 13명에 이르고 부상자가 5명에 이른다.

지난해 2월까지 발생한 중대재해로 광주·전남



14일 오전 여수시 화치동 여천 NCC 3공장으로 경찰 차량이 들어가고 있다.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이날 폭발사고로 4명이 숨진 여천 NCC 3공장을 압수수색했다. /연합뉴스

지역에서 7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2명이 다친 것에 비해서도 훨씬 많다.

권오산 민주노총 노동안전부장은 “지난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도 사전 예방조치 등이 진행되지 않아 현장에 크게 달라지지 않아 산업현장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실효성 있는 점검을 위한 노동계, 시민사회가 포함된 민관 합동 점검이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여천NCC 사무실·하청업체 등 3곳 압수수색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8명의 사상자를 낸 여수국가산단 여천NCC 공장 폭발사고와 관련,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

전남경찰청은 14일 노동부 광주지방고용노동청과 공동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여천NCC 3공장 사무실 2곳과 열교환기 청소 작업을 맡았던 하청업체 등 3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이날 압수수색을 통해 사고가 난 열교환기 도면과 압력테스트 작업일지, 작업계획서 등

각종 서류와 PC 등을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청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입증자료를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함께 현장 안전 규정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며 피해자들이 다발성 장기 손상으로 숨진 것으로 추정하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부검 결과를 토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화정 아이파크 붕괴사고 수사 ‘속도’

하청업체 관계자 3명 추가 입건

‘광주시 서구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경찰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광주경찰청 수사부는 14일 업무상 과실 치사상 혐의로 하청업체인 철근 콘크리트 업체 관계자 3명을 추가로 입건했다.

이 업체 대표는 이미 불법재하도급 의혹이 제기되면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수사를 받는 중이다.

경찰은 이로써 붕괴 사고 관련, 현대산업개발 관계자 6명, 하청업체 관계자 4명, 감리 3명 등 13명(중복 1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이번 주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국토부 산

하 안전보건공단 등 전문기관의 붕괴원인에 대한 1차 분석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붕괴원인에 대한 전문가 집단의 조사를 토대로 수사 속도를 올릴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경찰은 또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시료에 대한 분석결과도 수사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대산업개발과 하청업체의 엇갈린 진술을 확인하기 위해 공사관계자 소환조사와 대질조사 등 책임자 규명을 위한 수사도 속도감 있게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장흥서 전자발찌 끊고 도주

성범죄 전과자 징역 1년 선고

장흥에서 전자발찌를 끊고 달아난 성범죄 전과자가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1부(부장판사 김재근)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

반 혐의로 기소된 마창진(51)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마씨와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으로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마씨가 (성범죄) 수사 대상이 될 것이 두려워 도주 후 전자발찌를 훼손했다”면서 “1심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마씨는 지난해 8월 21일 장흥군 장평면 일대에

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마씨는 지난 2011년 청소년 2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지난 2016년 출소했다.

마씨는 출소 이후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돼 법원의 명령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었지만 지난해 8월 21일 훼손하고 달아났다가 도주 17일 만에 붙잡혔다.

/김지을 기자 dok2000@

“체류시한 임박 이유 난민 신청자 비자 변경 불허 부당”

체류 시한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난민 신청자의 비자 변경 신청을 무조건 불허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고법 행정 1부(수석 부장판사 최인규)는 캄보디아인 A씨가 광주 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체류 자격 비자 교체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출입국사무소가 A씨에 대한 체류자격 변경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며 A씨 손을 들어줬다.

캄보디아인 A씨는 지난 2015년 3월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입국, 체류하다가 기간 만료(2020년 3월 12일) 전인 2020년 3월 9일 난민 인정신청을 한 뒤 다음날 난민신청자 자격으로 체

류자격 변경허가 신청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광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대한민국에서 1년 이상 체류하고 있다가 체류기간 만료일에 임박해 난민인정신청을 한 사람”의 경우 난민신청자에서 제외한다는 법무부의 지침을 근거로 A씨를 신청 대상자에서 제외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재판부와 달리, 출입국사무소측이 행정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 때 A씨가 입게 되는 불이익을 비교해 판단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해당 처분으로 얻게 될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게 될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것인지를 비교·교량해서 판단해야하는데, 그런 절차·과정을 거쳤는지 찾아볼 수 없었다는 얘기가.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h2>경매교육 [특수전문반]</h2> <p>기초반, 중급반</p>		<h2>상가매매(상무지구)</h2> <p>중심상업지역 6층, 7층 (총분양 140평) 시세 -> 9억 급매가 -> 5억8천 (보 3천, 월 350만, 용 3억5천) (사무실 리모델링함,빠,유층,모든업종가능 즉시입주 시비없음)</p>	<h2>신축원룸매매(신축)</h2> <p>1개동 원룸 (상가)로 노후대비끝(공실없음) ● 월수익 750만 ● 년수익 9000만 ● 매가 13억5천 (보2천, 용 6억5) ★ 4개동(월수익 3000만) => 년수익 3억6천 매가 56억(보8천, 용25억)</p>
<p>1) 특수경매전문반 모집(선착순 8명) (유치권 전문, 법지)</p> <p>2) 직업 전문반모집(배우면서 돈버실분 환영) ● 기초반, ● 중급반, ● 특수반 (기초부터 ~ 실전 ~ 특수까지)</p>	<p>광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서구 화정동(주택) ▶ 감정가 2억5천 -> 최저가 1억7천 (1/21) 서구 쌍촌동(아파트) ▶ 감정가 1억7천 -> 최저가 1억1천 (1/27)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95억 -> 최저가 66억 (2/3) 북구 용봉동(다가구원룸) ▶ 감정가 8억3천 -> 최저가 2억9천 (2/3) 광산구 수완동(근린상가) ▶ 감정가 8억1천 -> 최저가 5억6천 (2/3) 서구 화정동(근린주택) ▶ 감정가 3억2천 -> 최저가 2억2천 (2/3) <p>전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광양시 성황동(임야) ▶ 감정가 18억 -> 최저가 5억1천 (1/10) 목포시 옥암동(근린시설) ▶ 감정가 25억 -> 최저가 14억 (1/10) 진도군 진도읍(근린시설) ▶ 감정가 32억 -> 최저가 22억 (1/10)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정가 9억7천 -> 최저가 3억5천 (1/20)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정가 2억1천 -> 최저가 6천1백 (1/27) 나주시 금천면(주택) ▶ 감정가 4억1천 -> 최저가 2억9천 (2/3) <p>시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남 창원시 의창구(근린상가) ▶ 감정가 40억 -> 13억 (1/13)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근린시설) ▶ 감정가 64억 -> 최저가 32억 (1/25) 		
<h1>010-6670-9800</h1>			